영암 F1대회 50일 앞으로

우회도로 뚫려 '교통대란' 없다

〈무안 일로읍~영암 삼호읍 개통·국지도 49호선 확포장〉

수도권·광주방면 교통량 40% 분산 효과

한옥 호텔 '영산재' 등 고급 숙박 시설 확충

지상에서 가장 빠른 스포츠, '2011 F1 코리아 그랑프리'가 50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1개 대회 평균 관람객이 20만명에 달하고 연간 관람객만 400만명, 전 세계 188개국 6억명의 눈을 사로잡는 세계 최대의 스포츠 이벤트가 '폭풍 질주'를 시작하는 때가 50일(결승전 10월 16일)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오는 10월14일~16일 열리는 대회의 준비상황을 분야별로 점검해본다.

◇"교통지옥 없게 할 것"=지난해 한국 최초 F1 대회를 보겠다며 경주장을 찾은 관람객(16만5000여명)이 한결같이 쏟아낸 불만 사항이 허술한 교통 대책이다. 비를 맞으며 30분 넘게 진흙탕을 걸어가던 관람객 상당수는 올해도 홈페이지를 통해 대회 기간 교통 대책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고 있다.

조직위원회는 지난해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대책을 마련하고 실제 상황을 방불케하는 예행연습을 진행하고 있다.

조직위는 우선, 수도권과 광주방면에서의 교통 수요 분산을 위해 목포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무안군 일로읍 청호리~영암군 삼호읍 서호리·7.2㎞)개통과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12㎞)의 확·포장 사업을 완료해 지난해 영산강 하구언으로 몰렸던 수도권과 광주 방면에서의 교통량의 40%를 분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10만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차량을 이용해 몰릴 것에 대비, 경주장에서 10~20분 떨어진 대불산단 인근에 환승주차장(4개소 2만면)을 조성하고 셔틀버스를 650대 운행하는 한편, 버스전용차로(11㎞)와 가변차로(4㎞)를 운영해 지난해 빚어졌던 '교통대란'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지난해의 경우 가변차로가 운영되지 않은데다 버스 전용차로마저 운행되지 않아 셔틀버스와 승용차가 뒤섞이면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다.

◇"섹스모텔, 숙박난 없다"=지난해 첫 대회를 치르면서 대회 조직위원회를 가장 곤혹스럽게 했던 사항 중 하나가 외국 언론에 소개된 'F1팀들 섹스모텔로 떨어지다'는 기사다.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지적에도 불구, 고급 숙박시설 문제가 부족하면서 제기된 비판을 감수할 수 밖에 없었다.

조직위는 올해의 경우 영산재 한옥 전용 호텔(31실)과 영암 그린관광호텔(44실), 광주 홀리데이인(204실) 등 광주·전남권에 10개소(710실)의 고급 숙박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기존 모텔급 숙박시설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여 지난해 이미지를 불식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숙박기능을 갖춘 KTX 해랑 관광열차(2편)를 운영하고 화원관광단지(500동)와 남악신도시(200동)에 1800명이 수용 가능한 텐트촌과 캠핑카(남악 신도시 30대·관광단지 50대)를 설치해 관람객들의 숙소로 제공키로 했다.

조직위는 결승전이 열리는 16일을 기준으로 3만5547개의 객실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선수와 운영진 등 대회 관계자에게 제공하는 객실의 경우 3624개, 일반 관람객들을 위해 3만1900여개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간 내 사용 가능한 관광숙박시설만 4만2552실인 만큼 숙박난 해결은 문제가 없다는 게 조직위 입장이다.

◇"홍보, 스폰서십 마케팅 총력"=조직위가 대회를 50일 앞두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게 티켓 마케팅과 홍보다.

가뜩이나 팍팍한 지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경주장을 지어놓고 수백만달러의 연봉을 받고 전세기를 타는 주최측에 무작정 퍼줬다는 비난을 더 이상은 받지 않겠다는 각오다.

실제 조기 구매자들에 대한 50% 할인 정책을 제시하고 지역 연고기업 및 기관·단체 구매자를 위한 추가 할인 정책으로 지난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티켓 판매량을 기록했는가 하면, 'F1 비즈니스'의 핵심이라는 기업부스도 17개 중 14개가 채워졌다.

서킷 주변 안전시설·펜스 등을 뒤덮는 스폰서 광고에도 3~4개의 기업들의 문의가 잇따르는 등 치열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해 나름의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소녀시대' 등 아이돌 그룹 동원 관중몰이

메인스폰서 아직 확보못해, 수익 우려 여전

하지만 수백억원이 투입된 대회인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같은 점을 고려해 주관방송사인 MBC를 활용, 영암 서킷과 F1 대회를 소재로 한 방송 프로그램(세바퀴·우리 결혼했어요)을 내보내 지역만이 아닌 전국적인 관심을 제고하는 한편, 인기 아이돌 그룹을 동원한 대규모 문화 행사를 통해 관중몰이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대회 기간 중인 15일 오후 경주장 내에서 '소녀시대'와 '슈퍼주니어'가 출연하는 'K-POP'한류 콘서트와 록 콘서트를 열고 공군 블랙 이글팀을 초청한 에어쇼(16일), 그리드걸 선발대회 등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해 관람객들을 경주장으로 불러올 계획이다.

◇성공 개최, 풀어야할 과제도=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전남개발공사가 KAVO로부터 경주장을 인수하기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해 미준공 경주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상업적인 대회임에도 수십만원의 고가 티켓을 구입한 일반 관람객들을 위한 배려가 미흡하고 홍보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국내외 대기업들의 무관심 속에 타이틀 스폰서는 여지껏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 고가의 TV 중계권료 및 개최권료를 낮추기 위한 협상도 사실상 물건너간 만큼 대회 수익성 창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2011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컨벤션'이 25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막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전남관을 방문한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전남도제공〉

■ 전국 16개 시도지사협 뭘 논의 했나

지방분권 구체화 개헌 필요하다

국회에 지방의견 반영 장치를

전국 16개 시도지사협의회가 25일 만나 민선 자치 20주년을 맞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방자치'가 성년을 맞았으나 여전히 중앙정부에 예속된 권한과 예산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민의, 지역민에 위한, 지역민을 위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기 지방에 중앙의 권력을 분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집권 후반기에 들어선 지금 이는 퇴색됐으며, 지방분권과제는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이들 시도지사의 주장이다.

이들 지역 대표자들은 지방분권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해 ▲지방분권국가로 개조하는 새 헌법체제 이행 ▲사용자 조세 징수 원칙 강화 ▲수평적 상설 협력체제 마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새로운 기능 정립 등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실질적인 중앙 권한·예산 이양해야= 현행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 단 2개 조문만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에 대한 핵심내용이 법률이 아닌 법령에 따르도록 규정해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이 어렵다는 것이 시도지사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적 취지와 정신이 헌법적 원리로 규정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수도권 지자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사용자 징수의 원칙' 강화도 현안으로 부상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정과제에 관해 수평적 입장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상설협력 체제도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중앙정부가 우월한 지위에서 지방정부를 종속변수로 취급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책사업의 결정이다. 대통령·시도지사회의를 제도화하고 국회 내에 지방정부의 의견을 상시 반영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 혁명시대를 맞이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을 새로 정립하기 위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구분 기준은 폐기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대폭 늘리는 것도 이번 과제에 포함됐다.

◇단기 과제로 우선 예산 지원 시급=시도지사들은 우선 필수불가결한 사업들에 대한 국고보조를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항목만 무려 17가지다. 먼저 광주시는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국비지원기준 상향조정 ▲국고보조 대상사업 지급범위 확대 등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한계농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가중치 상향조정 ▲농작물 재해보험 국고지원율 상향 조정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국비지원 등을 건의했다. 전북도는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규정 폐지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비율 상향조정을 주장했다.

이 외에도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 국비보전(부산), 택시 감차 보상 국비지원 (대구·울산), 기초노령연금 전액 중앙정부 지원(인천), 전국적 광역사회복지시설의 국비지원 확대(충북) 등도 추가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종두

청와대 한숨 소릴 듣고나 있는건지…